

위험사회론과 사회적 위험의 역동성: 사회적 위험의 거시적 연구를 위한 비판적 검토*

정 무 권**

Recently, the theories of risk society have emerged as a new perspective to explain social changes to the late modernity, based on the uncertainties and fears of the widespread artificial risks that the first modernization had created. This paper aims at critically exploring the contributions and limitations of those theories of risk society to understand the dynamics of social risks in terms of their causalities and impacts, which have been major research objects in the fields of the welfare state and social policy. For this goal, this paper focuses on the following three issues. First, it discusses with the epistemological and ontological debates on the conceptualizing risks. Second, it critically examines the theoretical and empirical implications that the reflexive modernization and individualization to understand the dynamics of social risks. And third, based on these critical reviews, it suggests the changing roles of the welfare state and new governance issues in the adaptation to the dynamic changes of social risks and their new impacts on society.

[Key Words: Risk Society, Dynamics of Social Risks, Reflexive Modernization, Individualization, Changing Roles of the Welfare State, New Governance of Social Policy, Ulrich Beck]

I. 서론

최근 위험(risk)이라는 개념이 현대사회 변화의 중요한 특징과 변화를 설명하는 핵심개념으로 부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체르노빌 핵 사태에서 보여준 핵 안전위험, 화학약품 및 의약품의 부작용에서부터 시작하여 각종 가공 식품 및 유전자변이 식품 등에 의한 건강위험, 각종 공해문제와 지구온난화가 보여주는 환경위험,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으로

* 이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2010년도 한국사회기반연구사업(SSK)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과제번호: B00271)

** 연세대학교 정경대학 글로벌행정학과 교수 (chungmk@yonsei.ac.kr).

인한 노동시장위험, 가족해체와 젠더의 역할변화에 의한 가족위험 등 다양한 현대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인류환경의 생태적 위험들은 인류의 과학기술의 진보가 의도하지 않았던 위험들이다. 또한 이러한 위험들은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태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자연재난과 기술재난이 겹쳐지면서 예측 및 통제할 수 없는 복합적 위험들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도처에 일어나는 테러 이에 따라 생태계 위험을 중심으로 사회학 및 문화인류학자들은 오늘의 세계를 글로벌위험사회(world risk society)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 글로벌 차원의 새로운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¹⁾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울리히 벡(Ulrich Beck) 등이 중심이 되어 발전한 위험사회론(theories of risk society)이 사회이론의 영역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위험사회론에 따르면, 인류는 계몽주의적 합리주의에 근거한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해 산업사회라는 1차 근대화과정을 거쳐, 지금은 산업사회가 만들어낸 다양한 위험들에 의해 전통적인 복지국가 단위에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는 글로벌 위험사회(world risk society)로 이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차원에서 새로운 제도와 문화, 그리고 거버넌스 등 다양한 대응양식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한편으로, 위험은 복지국가 및 사회정책 분야에서도 ‘사회적 위험’이라는 개념으로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 초기 산업화과정에서 노동시장에서 노동자층에게 가장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질병, 사망, 노령, 산업재해, 실업 등이 빈곤의 주원인이 되었던 전통적 사회적 위험뿐만 아니라 최근 급격한 글로벌 경제화, 산업구조의 변화, 인구구조의 변화는 노동시장의 불안정, 가족해체, 젠더문제, 돌봄문제 등 기존의 산업화시대와 다른 새로운 사회적 위험들(new social risks)이 빠르게 등장하고 있다. 이제는 신·구 사회적 위험들이 상호작용 하면서 사회적 위험의 성격이 복합적이며 특정 계급 또는 위험집단에게는 위험들이 집중적 또는 중첩적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사회적 위험들의 발생과 상호관계, 그리고 그 효과는 더욱 복잡하고 역동적이 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 논문은 현대사회의 전반적인 생태계 위험들을 중심으로 발전한 위험사회론이 제기하는 사회변동의 다양한 이론적, 경험적 이슈들이 최근 복지국가 및 사회정책 분야에서 다양해지고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사회적 위험을 이해하는데 어떤 함의들이 있을 수 있는가를 조명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위험사회론에서 제시된 다양한 이론적, 경험적 관점들과 최근 복지국가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회적 위험의 논의들을 연계시켜 더욱 다양해지고 복잡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위험의 역동성’을 거시적 차원에서 이해하는데 어떤 함의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를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1) 미국의 911 테러에서 극명하게 보여주듯이 과학기술의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가 아니더라도 사회적 차원에서 각종 종교적, 정치적 갈등에 의한 테러사태로 인한 안전위험 들도 세계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문제에 초점을 두고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는 위험사회론을 중심으로 논쟁이 제시하고 있는 위험의 개념화와 방법론적 차원에서 위험을 해석하는 방식들이 사회적 위험연구에 어떤 함의를 줄 수 있을 것인가를 알아본다. 둘째로, 위험사회론의 핵심 이론인 자기대면적/재귀적/성찰적 근대화론(reflexive modernization) 또는 2차 근대성(the second modernity)이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위험의 역동성에 어떤 새로운 관점을 가져다 줄 수 있고, 그 한계는 무엇인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해 본다. 셋째로, 위험사회론에서 제기하는 전 사회적 차원의 위험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대응양식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복지국가의 역할변화와 사회적 위험의 거버넌스 및 개별 사회정책 연구에 어떤 함의를 줄 수 있을 것인가를 검토해 본다.

II. 위험의 개념화와 인식론·존재론적/방법론적 문제

왜 사회적 위험의 거시적 연구에서 위험의 개념화와 방법론적으로 인식론·존재론적인 논쟁이 중요한가? 첫째로, 위험사회론을 통해서 제기되는 위험의 개념화에 대한 방법론적 논쟁은 전통적인 복지국가론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되지 못하고 잠재해 있던 ‘사회적 위험’의 개념화의 문제와 최근 복지국가의 변화를 인식론·존재론적 관점에서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다.

2) Giddens, Beck, Lash 등 위험사회론에서 제기하는 reflexive modernization에서 ‘reflexive’를 어떻게 이해하고 번역하느냐에 대하여 논란이 많다. 초기에 이 주제가 한국에 소개되었을 때, 이를 ‘성찰적 근대화’로 번역이 시작되어 어느 정도 관행이 되어왔다. 그런데 reflexive는 기본적으로 ‘의식’이 개입되지 않은 개념으로 이해된다. ‘성찰적’이라는 개념은 결과에 대한 숙고 또는 반성이 들어가는 개념이 강하다. 일부 학자들은 원래의 뜻을 살려 ‘재귀적’ (노진철, 2010), 또는 ‘반영적’ (장경섭, 2011) 등으로 사용하였다. 사실 reflexive modernization이라는 개념을 사용했던 벡, 기든스, 래쉬 들도 서로 다른 의미의 reflexive를 제시하고 있다. 원래 벡의 의미하는 reflexive는 ‘스스로를 반사하는’, ‘스스로에게 돌아오는’, ‘스스로와 대면하는’, ‘스스로에게 작용하는’ 등의 의미를 가진 것으로 이해된다. 반사, 반영, 재귀, 자기대면의 의미는 작용의 결과가 무엇인지는 전적으로 열려있는 불확정적 개념이다. 최근에 ‘reflexive’의 번역문제를 이 분야에 전문가인 홍찬숙교수가 본격적으로 들고 나와 벡의 의미로는 ‘자기대면적’으로 번역하였다(홍찬숙, 2010, 2012). 본인도 동의를 하는 편이다. 그런데 벡 자신도 사용하는 의미에 있어서 이중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초기 저술들에서는 위험사회론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자기대면적’ 의미로 주로 쓰이고, 후기 위험사회의 대안으로 세계시민주의를 대안으로 강조할 때에는 이러한 자기대면적 특성에 행위자의 지식과 숙고를 어느 정도 강조하는 ‘성찰성’을 포함하는 의미로 쓰여진 것으로 저자는 해석한다. 다른 한편으로, reflexivity의 문제를 인식론과 존재론적 관점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한 아처의 해석에 따르면 비판적 실재론의 시각에서 구조와 행위자 간의 관계에서 행위자의 구조에 대한 열린 해석 또는 내적 대화의 개념으로 reflexivity를 해석하고 있다. 본인은 이 용어를 사용하는 다양한 학자들의 의미를 살려, 자기대면적/성찰적의 개념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독자들에게 일차적으로 혼돈을 줄 수 있지만, 사용하는 자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로, 위험사회론이 제시하는 거시적 사회변동의 논리가 주는 함의들이다. 위험사회론은 산업화가 생산해낸 광범위한 생태계 ‘위험의 논리(logic of risk)’에 의해 ‘자기대면적’ 근대화(reflexive modernization) 또는 2차 근대성(the second modernity)이라는 개념으로 사회변동을 설명한다. 위험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자기대면적 대응이 최근 사회변동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반면에, 전통적 복지국가론에서는 사회적 위험은 시장실패 또는 자본주의체제가 발생시키는 구조적 결과이며 복지국가나 사회정책은 그 위험을 해소, 관리하는 주체로서 사회적 위험 논의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따라서 사회적 위험의 발생과 영향의 역동성에 대하여 인지적, 문화적, 문명적 관점에서 새로운 해석들을 제시하고 있는 위험사회론에서의 위험의 개념화와 위험논리는 오늘날 자본주의체제 또는 노동시장의 구조, 즉 위험을 발생시키는 구조논리에 초점을 둔 사회적 위험의 개념화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더욱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들의 발생과 그 결과에 대한 역동성을 새롭게 조명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음에 이에 대하여 자세히 논의해 본다.

1. 인식론의 다양성에 따른 위험에 대한 새로운 인식³⁾

1) 위험의 개념화와 인식론(epistemology)·존재론(ontology)의 문제

인류 문명의 역사는 인간 삶에서의 위험의 관점에서 보면 자연 및 사회 환경의 다양한 위험으로부터의 자기 생존과 안전(security)을 확보하고 더 나은 삶을 누리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가운데, 철학적 또는 사회과학적 차원에서 위험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18세기 계몽주의 사상과 함께 과학과 지식의 발전으로 위험에 대한 과학적, 체계적 이해로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근대성(modernity)이라는 개념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Giddens, 1991: 14-15).⁴⁾

3) 위험의 인식론적 또는 학문분과적 차원에서의 다양한 개념화를 잘 설명하고 있는 문헌으로 Lupton (1999), Taylor-Gooby and Zinn (2006: ch.2)를, 한국문헌으로는 노진철 (2010)을 참조.

4) 기든스를 비롯한 사회이론가들은 근대성을 "유럽의 봉건사회 이후의 제도와 행동양식으로서 20세기에 와서 세계역사적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해석한다. 근대성이란 자본주의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화와 근대국가 형성에 상응하는 개념으로서 17세기 계몽주의 등장과 함께 인류 진보와 사회질서가 이성사고와 객관적인 인간의 과학적 지식에 의해 문제들이 해결·통제되고 진보한다는 문명적(civilization) 개념이다(Giddens, 1991). 그리고 재귀적/성찰적 근대화(근대성) 또는 후기/2차 근대화(근대성)은 1차의 물질적 차원에서 자본주의적 산업화의 다양한 결과에 대응하는 인간의 자기 대면적(self-confrontational) 대응 또는 성찰성(reflexivity)에 의해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문명적 차원에서 총체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차원에서의 사회구조와 제도의 변화, 그리고 이에 따라 삶의 방식이 바뀌어가는 최근의 역사적 과정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변화의 핵심에는 인간 삶에서의 위험의 다양한 발생과 그 대응양식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근대성의 상징인 위험에 대한 객관적인 기술-과학적 이론에 근거한 예측과 통제력의 한계가 20세기 후반부터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객관적인 위험사고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회별 다양한 대응양식들이 차이가 나는 현상에 대한 문제제기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위험에 대한 인식론적 전환으로서 위험을 객관적, 기술적, 확률적 차원에서 별개의 사건·사고가 아닌 사회문화적 또는 사회구조적 맥락에서 이해하려는 위험사회학의 발전을 의미한다. 이러한 위험에 대한 연구 패러다임의 전환은 위험 그 자체의 존재론적(ontological), 인식론적(epistemological) 문제제기를 통해서 피상적인 현실 경험세계에서 잘 관찰되지 않는 인과적 기제로서 위험의 역동성을 이해할 수 있는 위험의 개념화와 위험과 사회현상과의 인과적 연계성에 대하여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게 된 것이다.

특히 최근 일부 사회이론가들이나 위험사회론의 학자들은 위험을 인류의 문명적 발전과 변화의 관점에서 근대성으로부터 후기 근대성(late modernity) 차원으로 변화하는 현시대의 중요한 인과적 요인으로 간주한다. 위험은 단순히 사건적 차원에서 예측과 손실보상이라는 기술적·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근대성의 주요 핵심인 인간사회의 제도와 문화와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행동양식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즉 위험사회론이 기존의 위험연구와 차별되는 중요한 의미는 ‘위험의 논리(logic of risk)’ 그 자체가 사회적 변동의 중요한 인과적 요인으로 간주하고, 자기대면적 또는 성찰적으로 대응하는 인간의 행동의 변화, 그리고 이런 행동의 변화가 가져오는 정치, 사회제도, 문화의 변화를 설명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은 위험을 기술적, 확률적 요인들의 결과로서만 인식하거나 순수한 문화적 차원으로 설명하려는 기존의 관점과는 큰 차별성을 갖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위험사회론과 그 비판을 통해 제기된 위험의 개념화에 대한 다양한 인식론·존재론적 관점들을 기존의 복지국가론에서 다루었던 사회적 위험의 현상과 그 개념화에 적용시켜보는 것은 오늘날 보다 역동적으로 변화하며 새롭게 나타나는 사회적 위험들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기술-과학적 객관주의 vs 인지과학적 관점

근대성과 함께 출발한 기술-과학적 객관주의 관점은 위험을 객관적인 실체이며 기술적인(technical) 의미로 이해했다. 즉 비결정성(indeterminacy) 또는 불확실성(uncertainty)을 의미하는 위험들을 과학기술과 지식의 진보에 의해 제거해 나감으로써 세계를 위험에 대한 예측과 관리가 가능한 근대세계로 전환시키는 과정으로 이해한 것이다(Lupton, 1999; Giddens, 1991). 공학, 통계학, 경제학, 심리학, 수리론과 같은 경험적, 과학적 학문의 발전은 위험발생의 확률을 예측하고 그에 따르는 손실과 이익의 규모를 계산해 내는 것을 점점 가능하게 만

들었다. 이를 경제학에서는 이익과 손실을 효용의 개념으로 측정하게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효용은 개인의 다양한 의사결정 및 정부의 정책결정의 기반이 되었다. 또한 위험을 ‘좋은 위험(good risk)’과 ‘나쁜 위험(bad risk)’로 구별하여 전자는 위험을 감수(risk-taking)를 할 가치가 있는 사회적 관념으로 인식되거나, 후자는 개인에게 불이익 또는 손해를 주는 위험으로 간주하여 이에 대해서는 예상되는 손실과 확률을 계산함으로써 시장에서는 이를 보호, 예방하는 다양한 보험제도가 발전한다고 해석한다. 이러한 기술-객관주의적 관점은 위험의 수리적 개념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인간은 위험을 효율적으로 예측, 관리, 통제할 수 있다는 지식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믿음을 주었다.

그런데 위험은 자연 속에 존재하나 과학적 측정과 계산을 통한 지식을 통해서만 그 객관적 입증 가능하다. 따라서 위험에 대한 기술-과학적 지식은 그 진실 여부를 떠나 위험에 관한 과학적 지식을 생산하는 전문가들과 이를 다루는 정부의 권위에 주로 영향을 받는다. 위험에 관한 기술적-과학적 지식을 충분히 접근 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반 대중 및 공중들은 위험의 존재와 문제의 정도는 일반 사람들의 위험의 수용가능성이라는 문제로 결국 개인들의 주관적 인지적 판단에 매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⁵⁾ 이에 따라 심리학 및 인지과학 분야에서는 객관적인 위험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일반 개인들에게 인지·인식되는가, 더 나아가서 사회적 사실로 구성되는가를 밝히는 것이 큰 도전이 되었다. 이에 따라 위험에 대한 인식론은 기술-과학적 객관적 현실에서 주관적, 인지론적 차원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인지과학적 관점은 과학주의적 행태주의에 인식론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위험의 객관주의적 관점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인지과학적 관점에서는 위험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만 개인들의 행동에 원인이 되는 것은 그 위험에 대하여 얼마나 위험이 되고 손해가 되는지를 인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개인의 의사결정, 집단행동, 정책결정에서 위험에 대한 인지도가 더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인지과학적 접근은 다양한 경우의 개인 또는 집단 간의 위험 인지성의 차이를 밝히면서 그 인과적 관계를 알아내는데 주력한다 (Lupton, 1999: 20).⁶⁾

그런데 인지과학적 관점은 방법론적 차원에서 중요한 두 가지 문제점이 제기된다. 하나

5) 처음에 이 문제를 Starr라는 학자가 “왜 원자력 발전이나 생명공학과 같이 그 안전히 철저히 계산된 복합기술을 주민은 거부하는가?”라는 질문으로 객관주의에 문제제기를 하고 기술과 위험에 대한 주관적 수용성의 문제를 제기하였다고 한다(노진철, 2010: 69).

6) 그 결과 여론과 개개인이 위험에 대한 정보가 어떻게 노출되어 있는가에 따라 위험의 인지도가 다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확률은 매우 낮지만 비행기추락사고, 선박조난사고, 지하철 화재사고처럼 인지가 바로 되고 기억에 오래 남는 위험은 매우 높게 평가되는 반면에, 교통사고나 산재사고와 같이 실제로는 자주 일어나지만 인지적 강도가 낮고 오래 기억되지 않는 위험은 낮은 위험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또는 위험이 새롭고 강요된 것보다 익숙하고 자발적인 성격이 강하면 수용성이 높고 덜 자주 일어날 것 같이 인식한다.

는 주관적 인식론이 가지는 인식론적 불확실성(epistemological uncertainty)의 문제이다. 인지 과학적 관점은 위험의 객관적 존재를 인정하지만, 그 인식은 개인의 주관적인 해석에 따라 다양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험에 대한 집단 또는 지역 등에 따라 인지도를 측정할 수 있지만, 그 다양한 주관적 차이들을 일관성 있게 설명할 수 있는 명확한 이론적, 방법론적 관점이 약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러한 문제점은 두 번째 문제점으로서 인간과 사회에 대한 존재론적 논쟁으로 연결된다. 인식론적 불확실성 때문에 주관적인 해석에 있어서 위험에 대하여 인지적으로 개인이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인지과학적 접근은 기본적으로 인간을 사회로부터 독립된 공리주의적 인간관에 기초하고 있다(Lupton, 1999). 즉 인간을 이기적인 개인으로서 사회로부터 분리된 원자화된 존재로 본다. 개인의 위험에 대한 대응은 위험이 개인에게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침에 따라 그 위험에 대한 개인의 주도면밀하게 인지된 계산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설명한다. 개인의 행위와 선택을 제약하는 것은 오로지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즉 개인은 자유로운 행위자인데 자기 자신에게 노출된 위험의 위험에 대하여 인지를 못하거나 또는 위험에 대하여 자신이 뭔가 할 수 있다는 자기효능감이 없는 경우에만 제약을 받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험과 그 위험과 연관된 행위들은 다른 위험들과 그 위험과 연관된 행위들과는 서로 별개의 것으로 간주가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개인주의적 차원에서 원자화된 인간을 상정하는 인지과학적 관점은 인간사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한 존재론적(ontological) 문제에 관심이 없다. 인간의 행위는 사회구조적 특성에 따라 해석되는 의미에 따라 행위하고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지과학적 인식론은 위험의 존재와 영향을 방법론적으로 오로지 위험의 인지적 모델화에 의한 통계적 검증을 통해서 설명한다. 대신에 위험의 수용성과 저항성의 문제가 사회구조적 또는 문화적 산물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위험의 인식론적인 관점에서 그 다음의 문제제기는 “위험들이 어떻게 의미 있는 사회적 사실로서 구성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3) 사회적 구성주의 vs 비판적 실재론

(1) 사회적 구성주의에서의 위험의 관점과 비판

앞의 개인의 인지적 관점은 같은 객관적인 위험들이라도 개인적으로 위험에 대한 인지들이 비일관성을 보이는 것을 설명하기가 어렵다. 즉 수많은 위험대상 중에서 어떻게 특정한 위험만이 사회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어떤 요인에 근거해서 위험에 대한 특정한 견해가 지배적이 되며, 또 위험에 대한 견해가 극단적으로 갈리는지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에

따라 특정사회에서 개인들의 위험에 대한 해석을 문화적 관점에서의 창출해내는 구성주의가 하나의 대안으로 등장한다. 사회적 구성주의는 최근 심리학, 문화인류학, 사회학, 사회역사, 철학, 문화지리학 등 다양한 사회과학분야에서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하나의 중요한 관점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위험에 대한 사회구성주의 관점은 위험을 사회적 구성체들(개인, 집단, 제도)의 집단적 구성물로 파악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위험의 표출이나 대응 형식이 사회영역의 문화적 차원에서의 특별한 속성에 달려 있다고 본다. 즉 위험에 대한 구성주의적 관점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가 원자화된 개인의 합리적 사고의 과정이 아니라 개인이 속한 집단의 문화적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강조한다. 위험에 대한 사람들의 인지와 평가도 위험 자체의 객관적 특성 때문이 아니라 특정한 사회의 문화적 조건에 따라 집단적으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어떤 위험이 누구에게 노출되어서 누구에게 해가 갔는지를 정확하게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험이라는 개념들이 그 사회에의 구성원들의 세계관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가 주요 관심사이다. 따라서 위험이라는 개념에 의해 형성된 사회규범이나 사회관계의 특징을 알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문화적 구성주의 시각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다글라스(Douglas)와 윌다브스키(Wildavsky)를 중심으로 한 연구그룹이 제시하는 문화적·상징적(cultural·symbolic) 관점이다(Douglas and Wildavsky, 1982).⁷⁾ 이들은 한 사회의 문화적 특징을 ‘집단성’과 ‘격자성’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네 가지 사회유형으로 나누어 각각의 유형화된 문화적 특성에 따라 위험에 대한 개인적 인지의 차이를 연계시킨다.

사회구성주의 관점에서 위험에 대한 지식과 담론의 형성을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한 근대 국가의 형성과 사회를 통치하는 통치기술로 설명하는 중요한 이론적 시각으로 푸코(Foucault)의 통치성(governmentality) 이론이 있다(Burchell, Gordon, and Miller, 1991; Lupton, 1999; Culpitt, 1999; 서동진, 2011). 푸코에 따르면, 근대 자유주의 성장과정에서 안전, 치안, 질병, 사망, 인구 등 위험과 관련된 주요 지식과 담론의 형성을 통해 근대사회의 형성과정에서 사회적 집단, 제도가 조직화되고 이를 통해서 개인이 감시되며, 규제되는 ‘규율적 권력(disciplinary power)’으로서 기능을 수행해 왔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험은 위험을 관리

7) 여기에서 ‘집단성’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외부 환경에 대한 내적인 경계설정의 척도를 말하며, 개인이 그가 속한 사회영역에 일체화된 정도에 의해 측정된다. 개인의 선택은 일체화 정도가 클수록 집단의 결정에 더 예측되기 쉽다. 반면에 ‘격자성’은 개인의 행위를 상호 규제하는 집단의 모든 사회적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개인의 삶이 외부에서 주어진 규범, 역할기대, 기능 등에 의해 제한되는 정도에 의해 측정된다. 개인에게 부과된 규정의 범위가 성, 연령, 종교, 집안배경, 계층 등에 따라 넓고 구속적일수록 개인적 협상이 가능한 삶은 줄어든다(Douglas and Wildavsky, 1993). 이 분석틀을 가지고 한국사회의 위험의 문화적 인지도를 연구한 것으로는(이재열 외, 2005)를 참조.

하는 가장 중요한 기술로 발전하였고 자본주의 체제가 발전함에 따라 자본주의 초기에 자선이라는 개인적 윤리가 사회보장이라는 사회적 윤리로 전환되어 자유주의 국가에서 복지국가로 전환하는 통치기술이 되었다는 것이다(서동진, 2011: 7; 동즐로, 2005). 이러한 위험담론은 오늘날 새롭게 신자유주의 담론을 통해서 위험에 대한 책임을 국가에게서 개인에게로 떠넘기게 되는 중요한 이데올로기적 기제형성 또는 통치기술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서동진, 2011).

구조나 과학-기술적 맥락을 부정하는 강한 해석학적인 사회구성주의자로서 에wald(Ewald)는 보다 극단적으로 “위험이라는 그 자체의 실재는 없다. 무엇이든 위험이 될 수 있으며, 그것은 모두 어떻게 사람들이 위험을 분석하는 가, 그것을 사건으로 고려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해석학적 차원에서 위험의 사회적 차원의 상대성을 강조하고 있다(Ewald, 1991: 199).

푸코와 에wald 등 위험의 담론적 관점은 오늘날 위험의 회피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담론이 역으로 복지국가의 축소와 사회정책의 잔여주의화를 통해 전문가나 지배권력의 사회적 통제의 역할을 강화하는 통치기술이 된다는 흥미로운 해석을 제시한다. 사회적 구성주의에서 출발한 이러한 위험에 대한 관점은 원자화된 개인의 합리성에 의한 위험의 인지적 차원이 아니라, 역으로 사회문화적 맥락 또는 행위자들의 담론에 의해 위험에 대한 개인의 인지의 성격과 특징이 결정되고 또 위험을 매개로 하는 사회담론의 형성이 인간행위, 사회규범, 사회적 제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인과적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⁸⁾

그런데, 그 다음 단계로 제기되는 문제는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강조하는 그 사회문화적 맥락을 결정하는 인과적 기제는 없는가, 있다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다. 즉 특정한 문화적, 사회구성적 맥락을 형성하는 사회적 질서 또는 구조는 없는가의 문제이다. 구성주의는 기본적으로 사회의 구조적인 맥락의 존재를 비판하면서 출발하였다. 전통적 구조주의의 단순하고 결정론적인 설명은 복잡하고 역동적인 현대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이다. 대신에 구성원들의 아이디어들에 의한 담론이 만들어낸 인간의 행위를 규율하는 제도적, 문화적 맥락을 상징한다. 사회적 구성주의는 담론을 통해 문화 또는 지배적인 가치구조가 형성되지만 그 담론의 형성과정에서 행위자의 특정 아이디어가 형성되고 특정 행위를 가능하게 하고 제약하는 사회적 조건과 구조와 행위자와의 관계에 대한 존재론적 가설이 없다. 따라서 왜 특정한 아이디어와 담론이 형성되고 어떤 담론이 지배적이 되며, 담론의 정치,경제,사회적 효과들에 대한 일관성 있는 설명이 어렵다는 것이다. 문제는 여전히 행위자 중심의 담론

8) 푸코와 부르디외를 중심으로 하는 후기 근대성의 논리는 벡, 기든스, 래쉬의 성찰적 근대화론과 함께 최근의 신사회위험의 발생과 개인화 현상,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복지국가의 역할변화를 이해하는 데 흥미로운 관점을 제공한다.

화 과정이나 문화적 맥락만으로 집단 간의 이해관계, 갈등, 권력관계가 어디에서 어떻게 발생하고 변화하는가를 일관성 있게 설명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이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전통적 구조주의의 결정론적 한계를 극복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구성주의의 사회문화적 특성의 형성과 변화를 일관성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인식론과 존재론에 대한 이론적, 분석적 틀이 필요하다.

(2) 위험사회론에서의 위험의 관점과 비판: 비판적 실재론(critical realism)의 시각에서 본 성찰성(reflexivity)의 비판적 재해석

앞의 사회문화적, 담론적 차원에서 위험의 문제를 제시한 사회 구성주의 관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위험의 논리가 인과적 차원에서 현대사회의 중요한 사회적 변동의 요인으로 간주하는 위험사회론 또는 ‘자기대면적’ 근대화론(reflexive modernization)이 최근 광범위한 위험의 발생과 관련된 사회변동을 설명하는데 주목을 끌고 있다.⁹⁾

위험사회론은 그동안 르네상스 이후 근대국가와 자본주의 발전의 추동력이었던 합리성에 바탕을 둔 과학기술의 발전과 물질적 생산에 초점을 둔 산업화시대를 1차적 근대성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대략 2차 대전을 기점으로 최근 현대사회는 산업화의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결과로서 도처에 발생하는 기술적, 생태적, 사회적 위험들이 만연하는 위험사회로 이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위험에 대한 불확실성과 공포에 대하여 행위자들의 ‘자기 대면성’ 또는 ‘성찰성’(reflexivity)의 결과로서 기존의 정치, 경제, 사회제도들이 급격하게 해체되고 변화하는 과정을 자기대면적 근대화(reflexive modernization)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그 결과로 산업화시대의 구조와 제도들이 약화, 해체되는 개인화(individualization) 현상이 나타나고 이에 따라 세계시민체제(cosmopolitanism)이라는 새로운 정치를 통해 제도와 거버넌스의 구축을 주장한다. 이를 이전의 산업화 시대의 1차 근대성과 구별되는 2차 근대성의 특징으로 간주한다.

여기서의 문제의 핵심은 위험의 논리를 매개해주는 ‘reflexivity’의 개념화의 문제이다.¹⁰⁾ 위험사회론은 이러한 2차 근대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위험을 순수 사회구성주의자 시각에서와 같이 주관적 인지로서만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 위험의 객관적 존재를 인식한다. 그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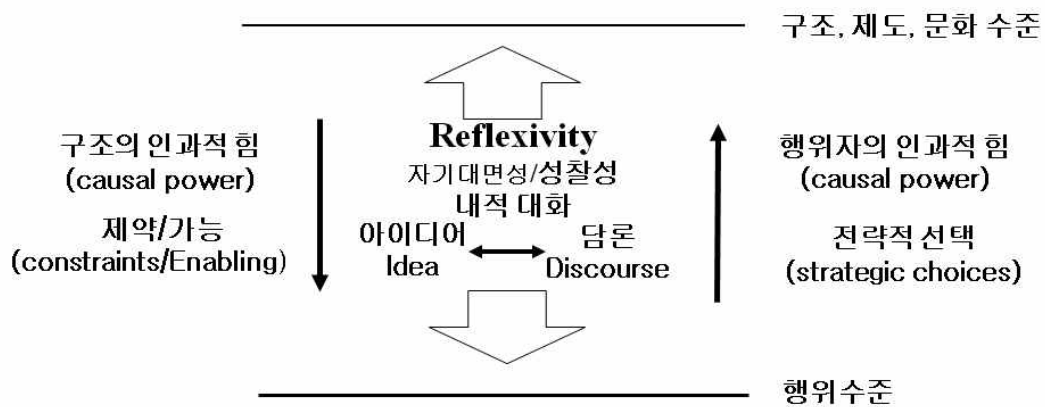
9) 이중에서 Beck의 저술은 매우 활발하며, 이제는 대세를 이루고 있다. Beck의 모든 저서들이 영어나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지 않다. 여기서 벡의 위험사회론을 이해하고 비판하기 위해 저자가 주로 참고한 문헌들은 다음과 같다. Beck, Giddens, and Lash, 1994; Beck, 1992, 1999, 2000, 2007, 홍찬숙 역, 2011,

10) 여기서 잠시 ‘reflexivity’를 우리 말로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다. 우선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reflexivity를 정확하게 우리말로 대체할 수 있는 개념이 없다. 아처의 reflexivity의 개념은 벡의 개념보다 포괄적이고 중립적으로 개념화하고 있다. 따라서 아처의 reflexivity의미는 벡의 자기대면적 특성에서 성찰적 특성에 이르기 까지 인간의 내면적 대화의 결과를 포괄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대로 사용하였다.

나 위험이 실제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구성원들의 위험에 대한 자기대면적/성찰적(reflexive) 인식과 대응으로서 문명적 사회변동의 중요한 인과적 요인으로 해석한다.¹¹⁾ 즉 위험사회에는 현대사회의 전반적 생태계 위험에 의해 물리적 하부구조와 상부구조적 사회체계가 하나로 융합되고 그 안에 위험이 내재되어 사회변동의 중요한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위험을 중심으로 한 사회변동의 인식론적 특징에는 사회변동을 설명하는 분석적 프레임에서 행위자와 구조와의 관계에 대한 해석의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회구성을 행위자와 구조의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비판적 실재론이나 여전히 현대자본주의체제의 구조적 특성으로 계급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관점은 벡의 사회구조에 대한 이해나 reflexivity의 개념화에서 구조와 행위자를 지나치게 융합(conflation)시키는 것에 대하여 강한 비판을 하고 있다(Archer, 2007; Atkinson; 2007; Lupton, 1999; Mythen, 2005 and 2006). 이들 비판에 따르면, 2차 근대성으로 이행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적 틀에서 구조와 행위자의 구별을 하지 않음으로써 설명의 일관성에 심각한 오류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비판적 실재론자인 아처(Archer)는 벡의 위험사회론에서는 위험에 의한 존재론적 의미와 사회변동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자기대면성/성찰성(reflexivity)이 행위자와 구조와의 상호관계를 전제하는 핵심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성찰성이 일어나는 사회적 맥락에 대한 구체적인 존재론적 관점과 성찰성의 과정(reflexive process)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는 점을 치명적인 약점으로 강조한다(Archer, 2007).¹²⁾

<그림 1> 구조와 행위관계에서 reflexivity 메카니즘



11) 이런 맥락에서 룩톤은 벡, 기든스, 라쉬 등의 성찰적 근대화론을 약한 구성주의(weak constructionism)으로 부르기도 한다 (Lupton, 1999: 29-31).

12) 이러한 비판에 대하여 홍찬숙은 벡은 오히려 기존의 인식론적, 존재론적 개념을 무너트린 중범위적 수준의 행위자 중심의 변증법적 방법론을 채택하여 사회변동에 대한 사회학적 상상력을 풍부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해석한다.

구조와 행위자의 관계를 비판적 실재론의 관점에서 보면, 그 실마리를 푸는데 유용할 수 있다(<그림 1> 참조).¹³⁾ 따라서 아처는 reflexivity를 어느 특정 시기나 사회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사회이던 존재론적으로 행위자와 구조간의 상호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구조에 대한 reflexivity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런 가운데 아처는 “reflexivity는 모든 정상적인 사람들이 자신들의 사회적 맥락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들을 고려하는 정신적 능력의 규칙적인 행사”로 정의한다(Archer, 2007: 4). reflexivity는 벡이 주장하는 것처럼, 2차 근대성에만 존재하는 체계적 성격이 아니다. 모든 사회에서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주관적 주체인 행위자가 객관적인 구조가 만들어 내는 가능성과 제약을 나름대로 숙고하면서 매개하는 속성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인간의 행동은 어떻게 나오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자신의 환경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고려하는 ‘내적 대화(internal conversation)’의 과정을 의미한다. 인간은 누구나 어떤 식으로든 이러한 자기대면적/성찰적 과정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인간과 환경(행위자와 구조)은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인과적 힘(causal power)를 가진다는 것이다. 이 때 그 결과는 이 두 가지 힘의 상호적 부딪침의 결과가 아니라, 인간 내면의 성찰적(reflexivity) 과정의 결과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 결과는 전통적인 구조론에서와 같이 결정론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내면의 심사숙고 과정의 결과에 따라 비결정론적이며 다양하다는 것이다. 즉 인간은 구조와의 관계에서 저항, 복종, 협력, 적응 등 다양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즉 인간의 성찰성(reflexivity)의 결과에 따라 상황적으로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적 실재론의 관점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벡의 관점의 문제점들이 드러난다. 예컨대, 벡은 초기 저작들에서 2차 근대화를 설명할 때 시스템 수준의 자기대면성을 강조한다(Beck, 1992, 2003). 그렇다면 시스템 수준에서 어떻게 reflexivity가 일어나는가에 대한 그 과정을 전제로 한 설명이 필요하다. 그런데 벡은 2차 근대화에서는 기존의 구조적 특성은 사라지기 때문에 자신의 이론은 행위자 중심이론임을 강조함으로써 행위자들의 개인적 차원의 reflexivity에 의존하게 된다. 이는 성찰성이 시스템 수준에서 일어나는 것인가 아니면 개인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것을 설명하는 데 비일관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또한 다음에 논의하게 되는 자기대면적 근대화의 결과로서 설명하는 개인화(individualization)의 문제에서도 그 인과관계와 효과를 구체적이며 설명하는 중범위적 사회변동론이나 인과적 관계의 분명한 인식을 필요로 하는 정책적 차원에서 설명하는 데 심각한 약점을 가지게 된다.

또 하나의 비일관성은 벡의 사용하는 reflexivity의 의미에서도 나타난다. 벡은 자기대면적 근대화론에서 인간 행위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서 자기대면적 특성을 더 강조한다. 그런데 최근에는 글로벌위험사회의 대응적 차원에서 세계시민주의 형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

13) 비판적 실재론의 선구적 학자로는 Bhaskar로부터 시작하여 다양하다. 국내학자로서는 이영철(2006), 김선희(2009)참조. 여기서는 비판적 실재론에 대한 소개와 논쟁을 다루지는 않는다.

해서는 행위자들의 보다 숙고적인 성찰성을 중시하기 시작한다. 사회구성원들의 reflexivity의 특징이 시대나 지역별로 집단이나 계급별로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나 그것은 행위자의 자율적 대응이 아니라 구조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결정된다. 그런데 벡은 reflexivity의 구조와 과정을 구체화 시키지 않음으로서 독자로 하여금 많은 오해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구조와 행위자 간의 관계에 대하여 좀더 명확한 분석들이 필요한 이유는 사회변동의 중요 메카니즘으로서 성찰성의 과정(the process of reflexivity)의 메카니즘에 대한 보다 분석적 이해의 전제 없이 어떤 집단 또는 어떤 사회는 더 성찰적이고, 그렇지 않은가, 또는 사회마다 다양한 근대화 또는 2차적 근대화의 특성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부딪치기 때문이다.

위험에 대한 인식과 대응의 다양성은 일단 위험이 문화적으로 구성된 산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위험을 만드는 객관적인 실체와 그 위험이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제도적 존재의 영향을 부인하고 설명할 수 있는지 고민해 봐야 한다. 후기 근대성의 특징으로 구조의 의미를 부정하는 벡의 입장에서는 사회변동의 동력으로서 최근에 행위자 중심의 자기대면성이나 성찰성에 근거한 정치의 역할, 즉 하위정치(sub-politics)를 강조한다. 위험이 낳는 불확실성과 공포의 reflexivity가 기존 사회의 구조적 결속력의 약화된 사회가 나오고, 이에 다시 에 의해 성찰적인 개인이나 집단에 의한 새로운 정치담론과 제도의 형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존의 구조나 제도가 해체 또는 약화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구조 그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구조의 변화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따라서 위험을 생성하거나 위험에 관련된 이해관계나 아이디어의 형성을 매개하는 객관적인 구조적 맥락과 행위자의 인식과 행동으로 인과적으로 연계시키는 행위자와 구조와의 상호관계(여기에서는 reflexivity)에 대한 이론적 프레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의미는 순수한 문화주의적 또는 구조와 행위자의 관계를 지나치게 융합시켜 버리는 행위자 중심의 관점의 오류를 지적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문화적 영향력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인과적 설명에서는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사이의 어떤 연계가 이루지는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위험을 구성하는 과정은 레토릭의 과정이다. 그러나 그 객관적 사건, 인간의 환경을 구성하는 외부적 실체에 대한 특별한 언어적 맥락(text)들이 어떻게 구성되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인식론적, 존재론적 타당성과 그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론적 차원의 타당성은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즉 사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한 존재론적 관점과 왜 특정한 사회현상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존재론적 관점이 타당하더라도 설명하고자 하는 현상에 대한 인과적 가설들은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복지국가론에서의 사회적 위험의 개념과 인식론: 위험사회론과 무엇이 다른가?

복지국가론과 사회정책분야에서 주요 개념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회적 위험은 어떤 인식론적 관점에서 위험을 이해하고 있는가? 전통적인 복지국가연구나 사회정책연구에서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인식론·존재론적 시각에서 그 의미와 해석에 대한 본격적인 논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복지국가론에서는 그동안 산업화에 따라 주로 질병, 노령, 실업, 산재 등 노동시장에서 노동자들이 주로 겪게 되는 사회적 문제들을 사회적 위험으로 간주해 왔다. 이러한 사회문제들은 미래에 불확실 하지만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위험의 성격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위험들을 겪게 되면 빈곤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소득보장 중심의 사회보험이라는 제도를 통해 해결해 왔고 사회보험제도가 오늘날 복지국가의 중심 제도가 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복지국가론에서 사용되는 사회적 위험의 개념화는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암묵적으로 자본주의체제의 시장의 결함 또는 구조적 모순의 결과로서 개인적 수준에서 특정 계급 및 집단들이 공통적으로 공유하게 되는 집합적 위험으로서 개념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¹⁴⁾

복지국가론에서 사회적 위험의 개념과 범주에 대하여 본격적 논쟁이 일기 시작한 것은 최근 산업구조의 후기산업사회로의 전환, 글로벌경제화와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전통적 사회 위험과 그 특성에서 다른 신 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s)이 등장하고 나서부터이다. 새롭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의 원인과 결과, 그리고 상호관계가 구사회적 위험과 다르기 때문에 신·구사회적 위험의 개념화와 범주를 정하고 그 상호 역동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Bonoli, 2006; Taylor-Gooby and Zinn, 2006; 최영준, 2011). 그러나 사회적 위험을 보다 깊은 차원에서 개념화하거나 사회적 위험의 발생과 변화의 역동적 관계에 대하여 좀더 체계적으로 제시한 연구는 아직 없다.

사회적 위험의 개념과 사회적 위험의 발생의 양식이나 사회적 위험의 종류를 중심으로 그나마 체계적으로 제시한 것은 에스핑-안데르센이다(Esping-Andersen, 1999). 그는 후기산

14) 복지국가론에서의 사회적 위험이라는 개념의 인식론적, 존재론적 관점은 다양한 이론적 시각에 따라 암묵적으로 사용되는 맥락 속에서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예컨대, 구조주의적 네오 마르크스주의의 시각은 구조적 영향력을 강조한 반면, 다원주의의 시각은 행위자 중심의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

업사회에서의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비교적 체계적으로 사회적 위험에 대한 논의를 전개한다. 그는 사회적 위험의 개념화를 자본주의체제의 발전과정을 중심으로 주요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s)나 임금노동자가 상품화됨으로써 발생하는 질병, 노령, 실업, 산재 등 소득상실을 일으키는 불행(misfortunes) 등의 나쁜 위험(bad risks)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를 시작한다(Esping-Andersen, 1999: 32-39). 그리고 복지국가란 이러한 위험을 공적으로 관리하면서 발전한 역사적 산물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위험을 구조적 산물로서의 사회적 문제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에스핑-안데르센은 보다 세밀하게 사회적 위험에서 ‘사회적’이라는 개념을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의미를 두었다(Esping-Andersen, 1999: 37). 첫째로, 개인적인 위험들이 사회 전체의 복지적 관점이 문제가 되었을 때 집단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집단적인 사회적 보호체제는 그 사회의 경제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실업에 대한 사회적 보호체제가 없다면, 기술의 진보에 대한 저항이 심할 수 있다는 것을 예를 든다. 둘째로, 사회가 이러한 위험들을 기본적으로 공적 또는 사회적인 관점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사회적이라는 점이다. 그 사회 구성원들의 정치적, 문화적인 인식의 수준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로, 사회적 위험이라고 부르는 더욱 중요한 이유는 이러한 사회적 위험들이 더 이상 개인에 의해 통제될 수 없다는 점에서 사회적 위험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고 위험의 발생과 분배의 메카니즘에 따라 계급위험, 생애주기 위험, 세대 간 위험으로 나눈다(Esping-Andersen, 1999: 40-43). 계급위험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가장 취약하게 노출되는 계층인 노동자계급을 중심으로 불평등하게 분배되는 위험을 의미한다. 복지국가의 기원은 바로 계급위험으로부터 보호로 시작하였다. 그 후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생애주기에 따라 사회적 위험의 다양화와 불평등이 심화됨에 따라 생애주기에 따른 사회적 위험에 인식과 보호체제도 강화되었다. 또한 복지국가의 성숙과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세대간의 위험의 분산과 분배가 중요하게 인식되기 시작한다. 구조변화에 따른 사회적 위험의 종류와 위험분배의 패턴을 이해하고 왜 복지국가가 사회적 위험의 문제에 대하여 집합적 대응을 해야 하는가의 논리를 제시한 것이다.

위험사회론에서의 위험의 개념화와 인식론·존재론적 논쟁이 복지국가론에서의 사회적 위험의 역동성 이해에 어떤 함의를 줄 수 있는가?

첫째로, 위험사회론에서 위험이라는 그 자체의 논리(the logic of risk)로서 오늘날 근대성(modernity)의 중요한 특성과 변화양식을 설명하려는 것처럼, 사회적 위험 수준에서도 인과적 차원에서의 위험의 논리가 사회적 위험의 발생과 변화, 그리고 제도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를 고민해 보는 것이다. 기존의 복지국가론에서는 사회적 위험을 기술-기능적 정책의 관점에서는 단순히 시장의 실패에 의한 결과적 현상을 지칭하는 수단으로서의 사회적 위

험을 이해하거나, 자본주의체제의 변동과 복지국가의 성장과 변화를 설명하려는 정치경제학 또는 사회학적 관점에서도 주로 산업사회에서 후기 산업사회 또는 포디즘에서 포스트 포디즘으로의 산업구조나 생산체제의 변화에 따라 구조적 변화의 결과로서 사회적 위험의 내용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에 더하여 사회적 구성원들의 문화적 또는 문명적 대응차원에서의 사회적 위험의 역동성을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노동시장에서의 불안정과 이로 인한 가족관계의 변화 또는 젠더의 역할을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만을 그 원인을 보기 보다는 i) 행위자들의 자기대면적 대응 또는 성찰의 결과로 인한 사회적 위험에 대한 재해석 그리고 새로운 대응으로서 인생의 자기 결정성, 자아(self)의 형성 문제와 같이 총체적으로 구조변화에 대응하는 행위자의 심리적, 문화적 요인에 의해 사회적 위험에 대한 인지가 다르고, ii) 이에 따라 사회적 위험의 범주와 수준, 그 효과가 다를 수 있으며, iii) 그런 인지적, 문화적 맥락이 복지국가의 역할 및 사회정책의 변화에 미치는 점들을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둘째로, 사회적 위험의 인과적 발생의 역동성에서 위험사회론에서 제시하는 보다 광범위한 과학기술적, 생태적 위험들과 사회적 위험들과의 상호 관계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현대사회에서는 사회적 위험 외에도 다양한 생태적 위험들이 인류의 문명적 운명과 생활양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위험사회론에서 제기되는 기술적 위험, 환경위험, 생태계 위험 등은 자본주의 체제의 경제구조적 변화와 함께 건강, 노동시장, 가족관계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의 발생과 대응양식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기후온난화와 복지국가간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생태계의 위험과 사회적 위험 간의 관계에 대하여 보다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로, 위험에 대한 인식론적, 존재론적 차원에서 구조와 행위자간의 상호관계 논쟁은 복지국가 변동 및 사회적 위험에 대한 인과적 설명에서 단순히 구조적인 모순이나 실패의 문제 차원이 아니라, 비판적 실재론에서 제시하는 구조와 행위자들의 상호관계에 대한 보다 명확하기 체계적인 이해를 전체를 하고 사회적 위험의 발생과 효과에 대한 역동적 상호작용을 이해할 필요성을 제시해 준다.

Ⅲ. 위험사회론과 사회적 위험의 발생과 역동성의 구조:

개인화와 위험 불평등의 역설

1. 개인화(individualization) 논리와 사회적 위험의 역동성

1) 개인화의 의미

위험사회론의 자기대면적 근대화론이 위험발생의 총체적 논리를 이해하는데 함의를 준다면, 그 효과로서 제시되는 개인화(individualization)의 논리가 사회적 위험의 논의 수준에서 역동적 변화를 이해하는 데 새로운 함의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개인화의 의미는 현대사회에서 위험이 보편화, 글로벌화 됨에 따라 사회가 이에 대응하는 자기대면적 근대화의 결과로서 개인들의 행위를 규제, 제약해 왔던 기존의 구조 및 제도의 결속력이 약화되고 개인들이 자신의 생애를 스스로의 결정과 선택에 의해 구성해가는 현상을 의미한다(Beck and Beck-Gernsheim, 2002: 32). 다시 말해서, 2차 근대사회에서는 개인들은 계급, 핵가족 등 전통적 산업사회의 구조로부터의 결속력의 약화에 따라 마치 자신의 자서전을 쓰듯이,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개척하는 경향성이 강해진다는 의미이다(Beck, 1992: 132; Beck and Beck-Gernsheim, 2002). 노동시장에서의 직업선택, 결혼, 가족관계에서 자아의 중요성과 자기 결정성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위험의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는 이러한 개인화로 인한 자기결정성으로 개인은 구조로 자유로워지나 역설적으로 개인들은 기존의 보호체제로부터 보호받지 못해 다양한 위험에 더욱 노출이 되어 빈곤과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신에 불평등의 심화가 전통적인 구조인 계급에 따라 분배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의 특성에 따라 개인들의 선택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분배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인화 테제는 주로 노동시장, 가족관계, 젠더역할의 변화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때문에 사회적 위험 중에서 최근에 새롭게 부상하는 신사회위험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2) 개인화, 노동시장위험, 가족위험, 젠더역할의 변화: 역동성 논리와 비판

위험사회론은 최근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불안정성에 대하여 위험의 논리에 의해 설명을 하고 있다(Beck, 2000). 벡은 노동시장을 위험레짐(risk regime)으로 부른다. 노동시장의 위험레짐에서는 산업사회 이후의 근대화 과정은 계급 없는 자본주의적 성장을 하게 되며, 노동시장의 변화도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의 생산관계에 의한 부의 분배 논리(distribution of wealth)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생산관계를 넘어선 위험정의의 관계(relations of risk definition)에 의한 분배를 이해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Beck, 1998: 18). 위험을 인식하고 해석하는 법적, 인식론적, 문화적 매트릭스가 노동시장에서의 권력과 관계를 결정한다는 의미이다. 위험의 결과로서 불안정성은 노동시장에도 적용된다는 것이다.

벡은 노동시장에서의 개인화현상을 다음과 같은 3가지 요인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분석한다. 1) 경쟁과 이동성의 심화, 2) 개인적 차원에서의 교육에 대한 강조, 그리고 3) 집단적 구

조의 쇠퇴의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Beck, 1992). 노동시장에서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개인적 차원에서 교육을 강조하고 노동조직과 같은 집단적 구조가 쇠퇴하게 된다. 과거 20년을 보면, 노동시장에서 차별화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와 대학교육시스템은 다양한 주제의 선택과 탈출(exit)지점들을 만들었다. 노동시장 점점 경쟁적이며 적대적으로 변해갔고, 구직자들은 취업이 되기 위해 자신의 자격을 홍보하고 수시로 자격조건을 개선하고 재창조 해왔다. 위험레짐에서는 직업평가, 재훈련, 경력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고 있다. 위험레짐에서 요구하는 유연성과 이동성은 지역의 고용안정성을 약화시키고 지역의 집단적 고용체제로부터 다변화되고 특수화되는 형태로 개인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계급조직과 노동조직은 점점 와해되고 새로운 고용네트워크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개인화는 노동시장에서뿐만 아니라 가족과 젠더관계에서도 매우 심각하게 일어난다. 가족구조와 젠더역할의 변화는 노동시장의 변화와 함께 최근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주요 대상이다. 산업사회에서의 이상적인 가족 모델은 핵가족화 모델로 간주되었다. 산업화와 도시화의 결과로 전통적인 대가족주의에서 단일 부부 중심의 가족구조로서 변화하게 된다. 이 때 남성은 가족의 경제적 기반을 책임을 지는 남성이장소득자로서 여성은 가사노동을 담당하는 분업구조에서 일반적으로 2인 자녀를 둔 4인가족의 모델이다. 산업화시대의 복지국가의 발전도 남성생계부양자 중심으로 사회보험이라는 형태로 주요 질병, 실업, 노령 등 노동력의 상실에 의한 소득상실이라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제도를 중심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노동시장에서의 이동성과 유동성이 더욱 심화됨에 따라, 전통적인 가족단위와 가족생활이 노동시장의 변화를 감당할 수 없게 된다. 결과는 가족은 더욱 쉽게 해체되기 시작하고, 동시에 새로운 다양한 가족형태가 발전하게 된다. 더욱이 여성의 교육향상과 경제활동의 참여의 증가가 동반한 양성간의 갈등, 노동시장이 여성을 개별 노동력으로 고용하고 그것이 여성들의 기대와 조응하면서 가족이 공동체인지 아니면 성인 개인들의 자유로운 결사체인지 불분명해진다(올리히 벡, 2010; 홍찬숙, 2011).

특히 가족구조의 변화는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전통적으로 가족주의 문화가 강했던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 장경섭은 한국사회에서의 근대화과정에서의 가족의 역할과 탈가족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문화적 차원에서의 개인주의가 없는 개인화(individualization without individualism)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탈가족화(defamiliation)의 개념은 “개인들이 의도적으로 효과적인 가족생활의 영역과 지속성을 통제함으로써 사회재생산의 기능을 하는 가족부담을 줄이려는 사회적 경향”으로 정의를 한다(Chang, 2010: 542).¹⁵⁾

15) 에스핑-안데르센의 복지국가의 역할에서 가족주의와 연계된 용어로서 탈가족화(defamilialization)의 개념

이와 같은 위험사회론이 제시하는 개인의 위험회피(risk-aversion)의 논리로서 문화적으로 제도화되는 개인화 경향은 앞에서 논의한 노동시장과 더불어 가족구조와 가족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노동시장과 가족구조를 재구조화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사실 복지국가의 변동에 중요한 요인으로서 산업구조와 노동시장구조의 구조적 차원의 변동에 주로 초점을 맞춘 탈산업사회론, 후기산업사회론, 또는 포스트-포디즘과는 차별되는 이론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위험의 발생구조와 대응양식으로 개인화 현상의 설명은 기존의 복지국가론에서 제기하는 신사회적 위험의 논리에 비해 매우 새롭고 흥미로운 반면에, 몇 가지 중요한 논쟁점을 제기한다.

첫째로, 백의 개인화로 함축되는 사회현상의 주장들이 지나치게 과장되고 일반화되는 경향화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구체적인 인과메카니즘에 대한 비판과 논쟁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사회적 위험의 발생구조로서 구조와 계급의 이해이다. 백은 계급, 국민국가, 가족 등 기존의 사회적 특징을 설명하는 개념들을 이미 그 분석과 설명력의 의미를 상실한 ‘좀비카테고리(zombie categories)’로 규정한다. 이러한 전통적 사회학적,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의 구조에 대한 급진적 부정이 구조와 행위자 논쟁을 불러온다.

최근 사회변동은 기존의 구조로부터의 일탈이(de-routinization) 진행되는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개인화라는 개념으로 구조가 없어지고, 모두 개인문제화 된다는 의미는 아닌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앞에서 비판적 실재론의 관점에서 제기되었듯이 기존의 국민국가 중심으로 형성되어 그 안에서 개인의 행동을 제약하거나 가능하게 만들었던 구조가 세계화적 구조로 재편 또는 재구성된다는 의미이다.

백이 묘사하고 있는 서구 유럽사회의 노동시장의 특징들은 경험적 수준에서 메가 트렌드를 지적하는 차원에서 일면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 개인화로 개념화되는 사회변동의 특징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은 보다 세밀한 분석적 수준에서, 그리고 이론적 수준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노출하고 있다. 광범위한 기술적, 생태계, 사회적 위험들의 등장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현상들을 개인화라는 하나의 문화적 개념으로서 일반화하여 설명함으로써 중요한 분석적, 경험적, 이론적 세밀함을 잃어버리게 된다. 더욱이 개인화로 가는 인과적 메카니즘으로 단순하게 자기대면성(reflexivity)이라는 개념 하나로 응축해서 설명하는 것 또한 무리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경험수준에서 관찰되어지는 개

이 있다. 이 개념화 다른 개념이다. 에스핑-안데르센은 여성의 가사노동을 외부화 시키는 복지국가의 역할과 제도로서 탈가족화라는 개념을 사용하였고, 여기서는 가족의 재생산기능을 회피하여 산업화시대의 가족모델이었던 핵가족주의가 약화되는 경향을 의미한다. 따라서 장경섭은 여기서의 탈가족주의를 다른 한편으로는 위험사회에 대응하는 새로운 인구구조적, 사회적, 심리적으로 가족이 재구성되어 가는 다양한 패턴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Chang, 2010: 542).

인화라는 개념으로 그 현상을 증명하거나 부인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¹⁶⁾

이것은 바로 벡의 이론에서의 성찰적 근대화론을 메타이론적 특징으로 간주하면서도 실제로 구조와 행위자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이론적 틀이 없기 때문이다. 구조와 행위를 개인화라는 수준으로 통합함(conflation)으로써 개인별, 집단별, 계급별로 패턴화 될 수 있는 성찰성(reflexivity)의 다양성과 그 효과를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다.

둘째로, 앞의 문제점은 구체적으로 국가 간에 서로 근대화과정의 시공간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문화적 특징과 역사적 과정이 지역 및 국가간의 차이를 설명하는 비교론적 관점의 문제를 제기한다. 최근에 벡은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2차 근대성의 다양성을 인식하고 지역별로 근대화의 시간과 공간의 차이에 따라 다른 2차 근대화과정을 설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Beck and Grande, 2010; Chang, 2010). 흥미롭게도, 이러한 2차 근대성의 다양성 논의는 복지국가론에서 제기하는 복지레짐 및 복지자본주의 다양성과 같은 논리적 맥락에 있다. 그런데 이러한 2차 근대성으로의 사회변동을 함축적인 정의된 자기대면성/성찰성의 개념으로만 설명이 가능할 것인가? 결국 벡의 많은 대안들에 대한 논의들은 다양한 자기대면성/성찰성을 만들어 내는 개별 국가들의 역사적으로 형성된 구조와 제도, 문화들을 전제로 하고 구성원들이 어떻게 대응을 했는가를 설명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는 비교분석의 관점에서 레짐별로 국가나 지역별로 노동시장의 유연화 특성과 정도, 그리고 개인화 현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인과적 메카니즘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자기대면성/성찰성(reflexivity)의 과정을 설명하는 분석틀이 필요하고, 행위자를 둘러싼 구조, 제도, 문화와의 상호관계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분석틀이 필요하다. reflexivity의 과정의 차이는 결국 개인 구조와 행위로 분석틀에서 제시하는 비판적 실재론의 관점이 유용하다.¹⁷⁾

마지막으로, 개인화의 개념은 벡의 위험사회론에서 뿐만 아니라 기든스, 푸코, 부르디외, 바우만 등 최근 후기 근대성(late modernity)을 설명하는 사회이론에서도 중요한 사회변동의 현상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복지국가론에서도 노동시장구조의 유연화, 신사회적 위험의 등장에 따라 사회보험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집단적 사회호보체제가 잘 작동할 수 없게 되

16) 벡은 기존의 근대화 과정에서 형성되어된 구조와 제도의 부정이 거대한 위험사회에 도래하여 성찰적으로 새로운 대응 패러다임을 형성하는데 오히려 더 유용한 것으로 주장한다. 벡의 많은 글들의 특성은 사회변동을 설명하는데 거침이 없고 사실적 경험들을 직관적인 통찰력을 거침없이 기술한다. 사회변동에 대한 보다 개방된 시각으로 세계시민화(cosmopolitanism)라는 새로운 대안적 세계관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홍찬숙, 2010, 2011).

17) 같은 유럽내에서도 유연화문제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면서도 제도적으로 잘 적응하고 있는 덴마크의 사례와 노동시장이 상대적으로 경직적인 유럽대륙국가들, 또는 한국과 같이 이중노동시장구조가 심화되어 한편으로는 개인화 특성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회적 위험이 특정 집단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처럼, 복지레짐별로 다양한 수준의 개인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면서 복지의 개인화(individualizing of welfare)라는 개념으로 개인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복지 제도개발과 자격과 급여의 관점에서 남성부양가족 중심에서 개인화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경제위기와 다양한 신, 구사회적 위험들이 복합적이면서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동시성이에 대응할 수 있는 복지국가의 재정적 한계와 국가능력의 문제 때문에 이러한 복지 개인화의 의미는 점점 중요해 지고 있다.

2. 계급 불평등 vs 위험 불평등: 개인화의 역설로서 위험의 집중성과 중첩성

개인화 테제가 그 다음으로 흥미롭게 제기하는 쟁점은 사회적 위험의 분배에 관한 것이다. 즉 누가 위험의 주체인가에 관한 것이다. 위험사회론에서는 개인화의 결과로 전통적 불평등의 구조적 원인으로 간주되었던 계급은 현대사회에는 좀비카테고리로서 더 이상 무의미 하다는 것이다.

백은 전통적인 계급의 의미는 선진 자본주의 사회가 복지국가화 됨으로써 형식적으로는 계급구조 자체는 남아 있을지 몰라도 내용적으로는 사회적 이동이 증가했기 때문에 계급적 차이는 이미 승강기를 타고 올라가 버렸다는 ‘승강기 효과’를 강조한다. 이제 위험은 개인이나 위험의 특성에 따라 비정형적으로, 무차별적으로 분배된다는 것이다. 실업이나 직업의 감소가 특정계급에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계층에 걸쳐 일어난다는 것이다. 주기적인 글로벌 경제위기는 빈곤층에게만 실업이나 고용의 불안정성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고학력군에게도 똑 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적 불확실성의 시대에 노동시장의 변동성은 노동시장의 잉여의 위험을 보편화 시켰다. 이러한 고용의 불안정성의 기존의 계급과 젠더 분할 약화시켰다. 위험의 새로운 논리는 위험의 생산자에게 위험을 되돌려 받는 ‘부메랑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자리를 줄여 기업비용을 줄이는 교육을 받은 높은 지위의 기업엘리트가 자신의 일자리를 잃게 되는 그런 경우를 의미한다.

2차 근대화 과정에서는 위험이 과거의 산업화 시대처럼 계급중심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의 리스크에 대한 자기귀속적(재귀적) 대응성(reflexivity)에 의해 개인화 과정에 의해 위험의 분배가 계급이 아닌 위험의 속성에 따른 다양한 집단(성, 나이, 지역, 이민자, 민족집단 등)으로 또는 국가의 경계를 넘어 전 지구적으로 분배된다고 한다.

위험사회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한편으로는 위험이 계급,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어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전통적인 경직된 계급구조에 의한 위험과 불평등의 설명은 그 의미를 상실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위험의 분배에서 보여주는 경험적 현실은 위험이 한편으로는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특정 집단, 계급에게 신, 구사회위험들이 중첩적이며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예컨대, 에스핑-안데르센은 후기 산업사회로 진입하면서 숙련과 교육이 새로운 불평등 형성기제가 되고 있으며,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참여와 결혼관계가 결합되면서 저숙련 여성에게 사회적 위험이 중첩적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경험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Esping-Andersen, 2009).

즉 위험사회론은 구사회적 위험이 최근 빈곤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사회적 위험이 더욱 이들 빈곤계층에게 중첩화되면서 집중화적으로 분배되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문제를 상대적으로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오히려 계급 등 집단적인 차원에서의 위험의 발생논리를 비판하였던 ‘개인화의 역설’이라고도 할 수 있다. 즉 계급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더욱 분화되고 재구조화 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욱 적절할 수 있다. 그리고 백의 전통적인 계급분석의 비판에 대하여 현대사회에서도 사회적 갈등, 정치적 균열, 분배의 기준으로서 계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학자들은 계급의 역동적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조 또는 지위로서의 계급(classes in themselves)와 의식 또는 문화로서의 계급(classes for themselves)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Atkinson, 2007). 그런데 문화적인 관점에서 계급의식의 약화를 사회적 지위와 권력, 부의 분배의 틀로서 계급의 의미를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특히 사회적 위험의 경우 부메랑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고용위험은 저숙련, 저소득 계층에게 더욱 심화되어 재분배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많은 경험적 연구들이 보여주고 있다. 가족위험도 저숙련, 이혼 여성에게, 건강위험 또한 저소득에게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인지로서의 위험과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서의 구조적 힘을 여전히 구별할 필요가 있다.

IV. 위험사회론과 복지국가의 역할 변화: 개인화와 전지구화의 딜레마 속에서 거버넌스의 문제

1. 위험관리의 개인화의 문제와 복지국가의 역할

위험사회론에서는 복지국가의 역할변화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앞에서 논의했듯이, 위험사회론에서 자기대면적 근대화와 개인화 현상은 복지국가가 이룩해낸 산물이며 동시에 복지국가의 한계에 의해 급진화 된다. 즉 산업사회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발전한 복지국가는 기초생활의 충족과 교육의 확대를 통해 개인들의 경제적 지위

를 향상시켰지만, 역으로 위험사회가 광범위하게 도래하면서 계급의식을 약화시키고 복지 국가의 기능도 크게 약화되는 것으로 이해한다.

백은 이러한 복지국가의 위기를 2차 근대화의 특성으로 간주하고 상당히 급진적으로 해석한다. 국민국가 단위를 넘어선 위험의 글로벌화로 인한 전반적인 생태적 위험들이 가져오는 인류위기의 문제들을 국민국가 또는 복지국가 단위에서 해결할 수 없다고 단정한다. 복지 국가의 주요 기능인 부의 재분배, 사회적 위험의 보호만으로 오늘날 근대성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사회적 위험을 포함해 생태계 차원의 위험이 계급으로 이분화 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 계급, 계층, 국가 간에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위험사회론에서는 현 복지국가는 일차적 근대화 과정의 산물이기 때문에 이차 근대화과정을 겪고 있는 현대에서는 더 이상 잘 작동이 안 되는 것으로 주장한다.

복지국가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가? 위험사회론은 복지국가론에서처럼 복지국가가 주요 연구의 과제가 아니다. 사회이론적 차원에서 근대성이라는 개념으로 사회변동을 설명하고자 한다. 따라서 위험사회론에서는 국민국가 차원의 구체적인 사회정책이나 복지국가의 역할을 다루지 않는다. 1차 근대화의 산물로서 2차 근대성으로 가는 원인으로 본다. 따라서 위험사회론을 통해 복지국가의 역할 변화에 대한 함의를 구체적으로 가져오기 힘들다.

그러나 위험사회론이 거시적이며 장기적인 사회변동의 관점에서 복지국가의 문제를 잔여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다루지 않을 수 있지만, 보다 현실론적이며 정책적 차원에서는 복지 국가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나 세계화 시각에서 오래전부터 복지국가 위기를 제기하고 그 역할의 한계를 제기하였지만, 경험적인 현실은 여전히 문제의 발생과 해결 주체의 주 영역은 여전히 국민국가 경계 안에 있다고 할 수 있다. 2차 근대사회의 특징에 초점을 둔다면, 개인화, 탈표준화, 지식화에 따라 사회적 위험의 종류와 성격이 바뀌기 때문에 이에 따라 복지국가의 역할이 변해야 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세계시민주의화(cosmopolitanization) vs 글로벌 사회정책

20세기 말에 와서 세계화가 급진적으로 진전됨에 따라 세계시민주의(cosmopolitanism)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자본, 사람, 문화의 이동이 자유로워지고 국가 간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동시에 이러한 세계화의 문제점들이 국민국가 단위에 의해 해결되기 어려워짐에 따라 세계시민주의라는 맥락에서 글로벌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세계시민주의를 통해서 어떻게 글로벌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에 상응하는 제도로서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를 만들 것인가에 대하여는 학자들마다 다양한 이론적 관점과 접근방법들을 가지고 있다.

위험사회론의 관점에서는 백과 기든스가 비슷한 맥락에서 세계시민주의를 주장하고 있다. 위험사회론의 관점에서 세계화와 세계시민주의는 좀 독특한 이론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 사회적 위험의 관점에서 어떤 함의를 가지고 있는가? 이미 앞에서 밝혔듯이, 사회적 위험들과 그 요인들이 또한 국가경계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적 차원에서 상호작용하면서 발생시킨다. 특히 세 가지 차원의 위험이 전지구화적 관점에서 세계시민화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Beck, 1999, 2007; 올리히 백, 2011). 첫째로, 금융자본주의에 따른 금융의 위험 문제이다. 둘째로, 테러의 위험이다. 셋째로, 지구온난화의 위험이다. 그 중에서도 지구온난화는 세계시민적 성찰을 필요로 하고, 국민국가적 차원에서 해결 될 수 없는 위험으로 간주한다.

우선 경제적 세계화는 전세계적으로 분업화된 생산구조에 의해 국가의 역할을 축소시킨다. 또한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불안정화는 생산체제의 세계화뿐만 아니라, 노동력 이동의 세계화를 통해서 더욱 심화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근대성의 변화는 경제주의적 관점을 넘어서 문화적 차원의 사회적 위험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문명의 생태계를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자기대면적 차원의 'reflexivity'가 아니라 성찰적 차원의 'reflexivity'가 필요하며, 새로운 세계 공동체의 형성(cosmopolitanism)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아직까지 위험사회론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들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없다. 그러나 최근의 현상을 보면, 구체적으로 새로운 세계시민적 각성하에 글로벌 차원의 시민운동과 국가간의 공조, 국제기구 역할의 증대를 통한 조정장치와 협약 등 글로벌 차원의 거버넌스가 문제해결의 새로운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또한 복지국가론의 맥락에서 세계화의 현상에 따라 국민국가 차원에서의 빈곤문제를 비롯하여 각종 사회적 위험 및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려워짐에 따라 새로운 복지거버넌스 패러다임으로 글로벌 사회정책론이 등장하고 있다(Deacon, 2007; Yeats, 2002; 이주하, 2011). 최근 세계은행(World Bank)에서는 글로벌 경제화의 부작용이 심화됨에 따라 경제의 안정적 관리와 사회적 위험들에 대응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글로벌 차원에서 매우 포괄적이며 다차원적인 사회적 위험관리(social risk management)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Holzmann and Jørgensen, 1999 and 2000). 이러한 세계은행의 포괄적 사회적 위험의 개념적 틀과 관리전략은 사회적 위험을 '기술-기능적(techno-functional)인 관점'에서 세계경제의 관리적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대응하는 사회적 위험의 관리전략 체계를 제시한 것으로 해석한다(McKinnon, 2002). 반면에 반신자유주의 관점에서 복지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시각에서는 글로벌 거버넌스 차원에서는 정치·경제를 조정하는 복지국가가 아니라, 사람의 생활양식을 바꾸는 생태보존적 복지국가, 국제기구, 국제 NGO 등 더 나아가서 국가차원이 아닌 글로벌 차원에서의 다양한 조직, 행위자, 주체 간의 거버넌스가 필요하며, 새로운 대안 조직의 형태

를 강조하고 있다.

백은 2차 근대성의 방향으로 세계시민주의를 주장하지만, 그의 성찰성을 강조한 행위자 중심의 논의는 비결정론을 전제로 한다. 글로벌 위험사회로의 전환은 위험이라는 그 자체가 정치적 공론장을 만들어 냈고, 구조의 해체에 의해 결정되지 않은 다양한 주체들이 등장하게 된다고 한다. 이들을 유사주체로 정의하고 이들의 아이디어와 담론을 중심으로 하위정치가 발전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기존의 계급조직이나 국가가 아닌, 시민사회에서의 NGO를 비롯해 다양한 시민조직의 형성, 디지털 시대에 다양한 무정형의 소통 네트워크의 형성 등 다양한 유사주체의 등장은 새로운 차원의 자기대면성 또는 성찰성을 매개로 새로운 제도와 질서의 형성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글로벌 차원에서 다차원적인 거버넌스 구조가 필요할 것이다.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위험사회론에서 제기하듯이 문명적, 문화적 차원에서 세계시민주의의 담론화와 이에 대한 하위정치의 출현을 촉진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복지국가론에서 글로벌 사회정책의 관점에 제기하듯이, 각종 국제기구, NGO, 다양한 지역, 국제적 국가연합조직 등 국민국가의 경계와 차이를 넘어 복지와 위험대응의 국제규범을 만들어가는 세계 시민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V. 결론: 사회적 위험 역동성의 거시적 연구프레임과 새로운 연구과제를 위하여

지금까지 위험사회론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인식론적, 이론적 주장들을 사회적 위험의 역동성이라는 관점에서 어떤 함의들을 가져 올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위험사회론은 앞에서 비판했듯이 그 내재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복지국가론에서 제기해 왔던 좁은 범위의 사회적 위험론을 사회적 위험의 인식론·존재론적 차원에서부터 시작하여 사회적 위험의 다양성과 역동성, 그리고 사회적 위험의 해결을 위한 복지국가의 새로운 역할과 글로벌 거버넌스의 차원에서도 많은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첫째로, 위험사회론에서 제시되는 위험의 개념화와 논리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위험에 대한 개념화와 사회적 위험의 발생, 변동, 대응의 양식을 보다 일관성 있게 설명하기 위해서 구조와 행위자 간의 인식론적, 존재론적 문제를 좀더 체계적으로 바라 볼 수 있게 해주었다.

둘째로, 위험사회론이 제시하는 다양한 기술적, 정치적, 생태적, 사회적 위험들이 복지국가론에서 다루어 왔던 사회적 위험과의 연계성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 위험사회론에

서 제기된 다양한 위협들이 직, 간접적으로 전통적인 사회적 위험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일반적 위험과 사회적 위험간의 경계가 불분명해 진다는 것이다. 최근 위험사회론에서 제기하는 중요한 글로벌 위험은 기후변화에 의한 생태적 위험이다. 이는 자연재해이지만, 그 영향은 에너지 위기, 식량위기 등과 연관되어 경제생산체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위험의 문제로 연결되기 시작한다. 그 대응으로서의 복지국가의 역할도 크게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사회적 위험연구에는 이러한 다양한 환경적 위험과 사회적 위험간의 상호 연계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로, 전통적 사회적 위험 연구에서 위험에 대한 인식론적 관점을 제기함으로써 위험 자체가 가져오는 사회변동의 역동적 인과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그 인과관계는 행위자의 자기대면성 또는 성찰성의 매개를 통해 근대화의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로서 다양한 위험의 증가와 그 위험들에 대한 사람들의 문화적 대응양식으로 설명을 하려고 한다. 그 변화양식의 핵심 기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개인화 경향이다. 위험사회론은 개인화 경향은 노동시장에서 뿐만 아니라 가족구조와 가족기능의 변화에도 개인들의 위험회피의 대응양식으로서 개인화의 경향으로 설명을 한다. 반면에, 전통적 복지국가론에서는 사회적 위험의 발생과 그 효과에 대하여 자본주의 체제의 구조나 시장의 실패, 정치적 정당성의 관점에서 본 정치경제학적 관점이 주류가 된다. 따라서 구조나 제도적 맥락에서 위험의 원인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위험에 대한 인간의 문명적 차원에서의 인식과 대응들도 독립적으로 사회적 위험의 발생과 효과에 중요한 인과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넷째로, 위와 연관하여 자기대면적/성찰적 근대화론은 위험과 사회변동의 기존의 복지국가론이 기반을 둔 구조적 산물 중심의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자기대면성 또는 성찰성에 기반한 문화적 관점의 중요성을 제기한다. 특히 새로운 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s)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이에 대응하는 정책적 관점을 제시한다. 개인화의 맥락에서 자아(self)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발생이 기존의 복지국가론에서의 물질주의적 관점을 넘어 위험의 논리가 제기하는 문화적 관점에서 나타나는 개인화, 젠더 및 가족관계의 변화 등 사회적 위험의 새로운 인과적 관계를 볼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위험사회론이 제기하는 위험사회의 대안으로서의 국민국가 수준을 넘어서는 세계시민적 또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필요성에 대한 강조이다. 위험사회론에서 제기하는 세계시민적 대응은 현재 세계화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는 글로벌 거버넌스와 비교해 보면, 그 인식론에서부터 큰 차이가 있다. 국제기구나 국제정치 차원에서의 기구나 협약의 확대 차원에서의 조정을 넘어서서, 문명적 차원에서 세계시민적 차원의 성찰을 통한 새로운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와 같이 위험사회론, 더 나아가서 후기 근대성의 다양한 논리들이 제공하는 위험의 논

리들을 통해 기존의 정치경제학적 관점을 넘어 사회적 위험의 인과관계적 역동성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경험적 연구들이 진행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이에 대한 더욱 심층적인 토론과 상호 소통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선희. (2009). “비판적 실재론에 의한 제도변화와 설명가능성 탐색: 역사적 제도주의와 비교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47(2): 337-374.
- 노진철. (2010). 「불확실성 시대의 위험사회학」. 서울: 한울.
- 동즐로, 자크. 주형일 옮김. 2005. 「사회보장의 발명: 정치적 열정의 쇠퇴에 대한 시론」. 서울: 동문선.
- 서동진. (2011). “혁신, 자율, 민주화 --- 그리고 경영: 신자유주의 비판 기획으로서 푸코의 통치성 연구.” 「경제와 사회」. 89호. 71-104.
- 울리히 벡 외. 한상진, 심영희 편저. (2010). 「위험에 처한 세계와 가족의 미래」. 서울: 새물결.
- 울리히 벡, 홍찬숙 옮김. (2011). 「세계화 시대의 권력과 대항권력: 새로운 세계정치경제」. 서울: 길.
- 울리히 벡, 박미애, 이진우 옮김. (2010). 「글로벌 위험사회」. 서울: 길.
- 울리히 벡, 홍찬숙 옮김. (2011). 「세계화 시대의 권력과 대항권력」. 서울: 길.
- 이영철. (2006). “사회과학에서 사례연구의 이론적 지위: 비판적 실재론을 바탕으로.” 「한국행정학 회보」. 40(1): 71-90.
- 이재열 외. (2005). 「한국사회의 위험구조의 변화」. 21세기 한국 메카트렌드 시리즈 III.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이주하. (2011). “한국의 사회적 위험 관리전략과 거버넌스.” 「정부학 연구」. 17(2): 3-31.
- 장경섭. (2009). 「가족·생애·정치경제: 압축적 근대성의 미시적 기초」. 서울: 창비.
- _____. (2011). “개발국가, 복지국가, 위험가족: 한국의 개발자유주의와 사회재생산 위기.” 한국사회정책학회 2011 춘계학술대회 발표 논문. 2011. 5. 27.
- 최영준. (2011). “위험 관리자로서의 복지국가: 사회적 위험에 대한 이론적 이해.” 「정부학 연구」. 17(2): 31-58.
- 홍찬숙. (2009). “울리히 벡의 ‘위험사회’와 ‘하위정치’의 마키아벨리즘: 개인화 테제를 중심으로.” 「사회와 이론」. 14집. 213-241.
- _____. (2011). “루만과 벡의 근대성 이론 비교: 자기대면(reflexivity)개념과 주체의 문제를 중심으로.” 「사회와 이론」. 19집. 47-87.
- Archer, Margaret S. (2007). *Making our Way through the World: Human Reflexivity and Social Mobility*.

-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Atkinson, Will. (2007). "Beck, individualization and the death of class: a critique."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58: 349-366.
- Beck, Ulrich, and Beck-Gernsheim, Elisabeth. (2002). *Individualization: Institutionalized Individualism and its Social and Political Consequences*. London: Sage Publications.
- Beck, Ulrich, and Grande, Edgar. (2010). "Varieties of second modernity: the cosmopolitan turn in social and political theory and research."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61(3): 409-443.
- Beck, Ulrich, Bonss, Wolfgang, and Lau, Christoph. (2003). "The Theory of Reflexive Modernization: Problematic, Hypotheses and Research Programme." *Theory, Culture and Society*. 20: 1-33.
- Beck, Ulrich, Giddens, Anthony, and Lash, Scott. (1994). *Reflective Modernization: Politics, Tradition and Aesthetics in the Modern Social Order*. Cambridge: Polity.
- Beck, Ulrich. (1992). *Risk Society*. London. Sage Publications.
- Beck, Ulrich. (1999). *World Risk Society*. Cambridge: Polity Press.
- Beck, Ulrich. (2000). *The Brave New World of Work*. Cambridge: Polity Press.
- Beck, Ulrich. (2007). "Beyond class and nation: reframing social inequalities in a globalizing world."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58: 679-705.
- Bonoli, Giuliano. (2006). "New social risks and the politics of post-industrial social policies." in *The Politics of Post-Industrial Welfare States: Adapting post-war social policies to new social risks*. Klaus Armingeon and Giuliano Bonoli. eds. New York: Routledge. 3-26.
- Burchell, Graham, Gordon, Colin, and Miller, Peter. eds. (1991). *The Foucault Effect: Studies in Governmentalit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alhoun, Craig. (2010). "Beck, Asia and second modernity."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61: 597-619.
- Chang, Kyung-Sup, and Song, Min-Young. (2010). "The stranded individualizer under compressed modernity: South Korean women in individualization without individualization."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61: 539-564.
- Chang, Kyung-Sup. (1997). "Compressed Modernity and Its Discontent: South Korean Society in Transition." *Economy and Society*. 28: 30-55.
- Chang, Kyung-Sup. (2010). "The second modern condition? Compressed modernity as internalized reflexive cosmopolitanization."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61: 444-464.
- Culpit, Ian. (1999). *Social Policy and Risk*. London: Sage Publications.
- Deacon, Bob. (2007). *Global Social Policy and Global Governance*. London: Sage.
- Douglas, Mary, and Wildavsky, Aaron. (1982). *Risk and Culture: an Essay on the Selection of*

- Technological and Environmental Dangers*. Berkeley: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Draxler, Juraj. (2006). "Globalization and Social Risk Management in Europe: A Literature Review." ENEPRI. Research Report. No. 23.
- Edwards, Rosalind, and Glover, Judith. (2001). *Risk and Citizenship: Key Issues in Welfare*. London: Routledge.
- Elliot, Anthony. (2002). "Beck's Sociology of Risk: A Critical Assessment." *Sociology*. 36: 293-315.
- Esping-Andersen, Gøsta. 1999. *Social Foundations of Postindustrial Economi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Esping-Andersen, Gøsta. (2009). *The Incomplete Revolution: Adapting to Women's New Roles*. London: Polity.
- Giddens, Anthony. (1991). *Modernity and Self-Identity*. Cambridge: Polity Press.
- Giddens, Anthony. (1990). *The Consequences of Modernity*. Cambridge: Polity Press.
- Giddens, Anthony. (1999). *Runaway World*. London: Profile Books.
- Gordon, Colin. ed. (1977). *Power/Knowledge: Selected Interviews and Other Writings: 1972-1977* by Michel Foucault. New York: Pantheon.
- Grande, Edgar. (2006). "Cosmopolitan political science."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57: 87-111.
- Grande, Edgar. (2006). "Cosmopolitan political science."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57: 87-111.
- Holzmann, Robert, and Jorgensen, Steen. (2000). "Social Risk Management: A new conceptual framework for Social Protection and Beyond." World Bank. Social Protection Discussion Paper No. 0006.
- Holzmann, Robert., and Jorgensen, Steen. (1999). "Social Protection as Social Risk Management: Conceptual Understanding for the Social Protection Sector Strategy Paper."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11: 1005-1027.
- Jessop, Bob. (2000). "The Changing Governance of Welfare: Recent Trends in its Primary Functions, Scale, and Modes of Coordination." In *New Risks, New Welfare: Signposts for Social Policy*. Nick Manning and Ian Shaw. eds. Oxford: Blackwell.
- Lupton, Deborah. (1999). *Risk*. London: Routledge.
- McKinnon, Roddy. (2002). "Social Risk Management: A Conceptual Fallacy of Composition." *Risk Management*. 4(2): 21-31.
- Mythen, Gabe. (2005). "Employment, individualization and insecurity: rethinking the risk society perspective." *The Sociological Review*. 53: 129-149.
- Polanyi, Karl. (1957). *Great Transformation*. Boston: Bacon

- Taylor-Gooby, Peter, Dean, Hartely, Munro, Moira, and Parker Gillian. (1999). "Risk and the welfare state."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50: 177-194.
- Taylor-Gooby, P. and Zinn, J. (2006). "The current significance of risk." In Taylor-Gooby, P. and Zinn, J, ed. *Risk in Social Science*, 1-19.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Taylor-Gooby, Peter. (2010). "Does risk society erode welfare state solidarity?" *Policy and Politics*. 1-15.
- Yeats, Nocola. (2002). "Globalization and Social Policy: From Global Neoliberal Hegemony to Global Political Pluralism." *Global Social Policy*. 2(1): 69-91.
- Zinn, Jens, and Taylor-Gooby, Peter. eds. (2006). *Risk in Social Scien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논문접수일: 2012.04.30. / 심사개시일: 2012.04.30. / 심사완료일: 2012.05.17.>